

아래는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헌법안(공주민제 구현)」 초안이다. (문언은 최소한으로 두고, 설계는 법률로 위임하는 구조로 잡았다.)

대한민국헌법 일부개정헌법안(공주민제 구현)

1. 제안이유

노동소득 중심의 분배 구조가 악화되는 경제·기술 환경에서, 국민이 자본 및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의 헌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경제민주화 조항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영기업 국유화·경영통제 금지 조항과의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고, 조세 납부 방식의 다변화(금전 외 재산적 급부)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디지털 자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려는 것이다.

2. 주요내용

- 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국민자산계정·국민자산신탁) 조항 신설
- 경제민주화 조항에 “귀속·추출 남용 방지·분산 소유” 명시
- 사영기업 국유화·경영통제 금지 조항에 “경제민주화 목적” 및 “독립적 국민자산신탁”을 통한 수익권 보장 근거를 추가
- 조세법률주의에 “납부 방식” 포함, 납세의무에 “금전 외 재산적 급부” 가능 근거 추가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데이터 이용 안전장치 원칙 명시
- 자원 조항에 정보·데이터·디지털 인프라·알고리즘 자원에 관한 보호·공정 이용·이익 귀속 근거 추가
- (선택안) 근로의 의무를 “사회적 기여”로 확장

3. 신·구조문 대비표

(신설) 제34조의2(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

현행

(없음)

개정안

제34조의2(자본접근권 및 사회배당)

- 모든 국민은 국민경제에서 발생하는 자본소득 및 디지털·플랫폼 수익에 대하여 기본적인 접근권을 가진다.
- 국가는 제1항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자산계정과 국민을 수익자로 하는 국민자산신탁 제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제2항의 제도는 보편성, 비차별성, 투명성, 세대 간 계급 고착 방지 및 사적 지배의 방지 원칙에 따라 구체화되어야 한다.

(신설) 제34조의3(국민자산신탁의 독립성과 통제)

현행

(없음)

개정안

제34조의3(국민자산신탁의 독립성과 통제)

- 제34조의2에 따른 국민자산신탁은 국민 전체를 수익자로 하는 독립적 제도로서, 그 조직·권한·운영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국민자산신탁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법률은 그 임원 임면, 임기, 결격 및 해임 사유를 엄격히 정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면은 단일 기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하도록 다원적 절차로 구성하여야 한다.
- 국민자산신탁의 자산 운용과 의사결정은 투명하여야 하며, 이해충돌의 방지, 로비 및 외부 영향력의 공개, 회계의 분리와 공개, 상시적 감사가능성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 국민자산신탁은 기업의 일상적 경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의 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익 귀속 규칙과 그 집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은 예외로 한다.
- 국민자산신탁의 수익권은 보편성과 평등 원칙에 따라 부여된다. 법률은 수익권의 양도·담보 제공 및 상속에 관하여 계급 고착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을 둘 수 있다.
- 국민은 국민자산신탁의 운영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자산신탁의 처분 또는 운영으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 및 항고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법률은 그 절차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국가와 공공기관은 국민자산신탁에 대한 감독 및 감사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회에 대한 정기 보고 및 공개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개정) 제119조(경제질서)

현행

제119조

-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제119조

- (현행과 같음)
-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자본 및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공정한 귀속, 추출의 남용 방지, 국민의 자산 형성 및 분산 소유·참여를 위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개정) 제126조(사영기업 국유화·경영통제 금지)

현행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개정안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 또는 제119조 제2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은 국가가 아닌 독립적 국민자산신탁을 통하여 국민의 수익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의 일상적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원칙과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59조(조세법률주의)

현행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안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 과세요건, 부과·징수 절차 및 납부 방식은 법률로 정한다.

(개정) 제38조(납세의무)

현행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개정안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법률은 조세의 납부를 금전 외에 지분, 수익권 기타 재산적 급부로 정할 수 있다. 단, 법률은 납부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현행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개정안

제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모든 국민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국가는 정보·데이터의 수집·결합·이용이 개인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비식별화, 목적 제한, 접근 통제, 감사가능성 및 권리구제 절차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제120조(자원)

현행

제120조

-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개정안

제120조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가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정보·데이터·디지털 인프라 및 알고리즘 자원을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과 국민에 대한 이익 귀속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

4. 부칙(안)

제1조(시행일)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헌법 시행 당시 제34조의2 및 이에 따른 국민자산계정·국민자산신탁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일 전까지 법률로 정한다.

제3조(법률 정비)국회와 정부는 이 헌법 시행에 필요한 조세·재정·개인정보 보호·디지털 자원 관련 법률을 이 헌법 시행일 전까지 정비하여야 한다.

5. 선택 개정 조문

(선택) 제32조 제2항(근로의 의무)

현행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선택 개정안

제32조

②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근로 또는 사회적 기여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그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2026.1.21. 이상연